

베이비박스 양성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령 영아 파문 속 “생명 보호” vs “유기 조장” 찬반 논란

광주·전남 미신고 아동 절반 베이비박스행...“양성화로 체계적 보호를”
전국 2곳 민간 운영...UN “금지 권고”, 인권위 “인권 침해 아냐” 엇갈려

최근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유령 영아 50% 이상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박스는 강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다.
지난달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사건’을 계기로 베이비 박스가 ‘유령 영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6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3건의 유령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소재 및 안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주에서는 10건, 전남에서는 15건 등 총 25건의 부모가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비 박스는 전국에 단 두 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각각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와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다. 두 곳 모두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로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 중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2009년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이후 14년 동안 총 2083여명의 영아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유기 영아가 맡겨지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5월까지 42명의 영아가 맡겨졌다. 또 새가나안교회는 지난 2015년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고 지난해까지 총 144명의 영아를 받아들였다.

광주·전남의 영아 유기 부모들 또한 이 두 곳을 직접 찾아가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설치이후 끊임없이 법적 해석과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유기될 수 있는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오히려 영아 유기를 가볍게 여기도록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아 유기 자체는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을 때, 이 밖에 다른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권해발표를 발표할 때 ‘베이비 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며 베이비 박스 운영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베이비 박스는 아동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시 관악구가 베이비 박스 운영 교회를 방치해 유기아동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례상으로는 베이비 박스에 영아를 맡긴 대다수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3~2023년 10년 동안 베이비 박스와 관련해서는 19건의 판례가 나왔으며 이 중 17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뿐이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애인과 공모해 영아를 유기한 부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무죄 선고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베이비 박스에 두 명의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이 인정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영아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된 영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면 도리어 베이비 박스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다 실제로 유기 영아 보호에 효과가 있으므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 박스는 영아 유기와 출생 미신고로 인한 영아 사망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영아 유기를 사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더위 식혀주는 쿨링포그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역주택추진위가 190억대 사기” 피해 호소 광주지역 조합원들 “500여명 넘게 피해” 고소...경찰 수사 나서

경찰이 광주시 광산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씨를 사

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업무추진비와 조합 가입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사업이 중단돼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위원장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피해자가 500여명이 넘고 피해액은 19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신탁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넣었지만, 현재 계좌에 남은 잔액은 3000만원 수준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계좌 압수영장 등을 통해 신탁회사 계좌의 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신고 받고 집에 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무죄 광주지법 “술 취한 상태만 보고 주거지서 측정 요구 위법”

카드결제 내역에 음주 확인 안돼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신고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만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고자의 말만 믿고 음주장소, 마신 술의 양, 음주운전 장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20분간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일행 B씨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그의 집 부근에서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화가나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의 질문에도 횡설수설했다. A씨는 경찰에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식탁에 있는 소주병을 사진 찍으라고까지 했다.
A씨 아내 또한 “A씨가 소주를 한병 사와서 집에서 마셨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귀

가했는지 알고 있냐”라는 경찰의 질문에는 “낮에 손님을 만났고, 거레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흥분한 상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신고 내용과 A씨 차종·차량 색깔·집 위치 등이 일치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 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다. 술은 집 앞 편의점에서 사와 집에서 마신 것”이라며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일 관계로 싸워 기분 나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 카드결제 내역 등에도 음주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임의수사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